문재인 정부 600일

국민과의 OF소

이렇게 지켜왔습니다



2019년, 국민이 삶 속에서 변화를 제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) 국민과의 약속, 이렇게 지켜왔습니다

목차

➡ 문재인 정부 600일,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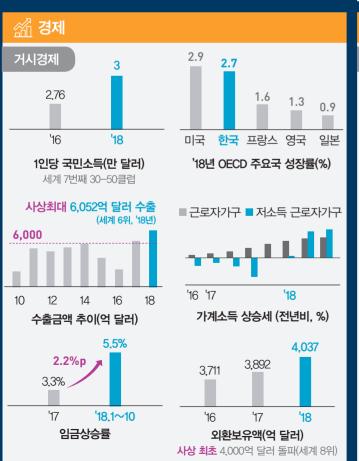
l . 평화	
1.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	
II. 국방·보훈	
2. 튼튼한 국방으로 평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	
3.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있습니다	
Ⅲ. 경제	
4.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견실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	1
5.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,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	1
6. 우리 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	1
7.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혁신성장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	1
8. 일한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	1
V. 사회	
9.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했습니다	2
10.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, 서민 생계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	2
11. 국민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	2
12. 투기는 차단하고, 실수요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은 강화했습니다	2
13. '과로가 있는 삶'을 탈피하고 우리사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	2
V. 안전	
14.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	3
15.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	3
VI. 지역	
16. 지역경제,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	3
17. 지방분권, 가속화하고 있습니다	3
Ⅶ. 국제	
18.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	3
▶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	4
■ 소상공인 · 자영업자 맞춤형 대책	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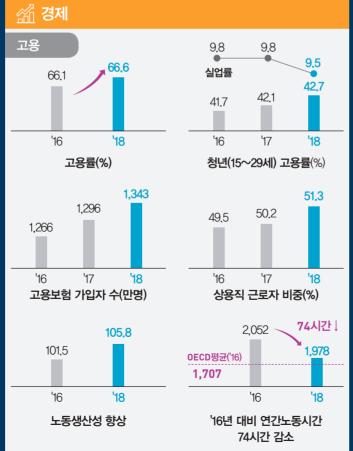
문재인 정부 600일

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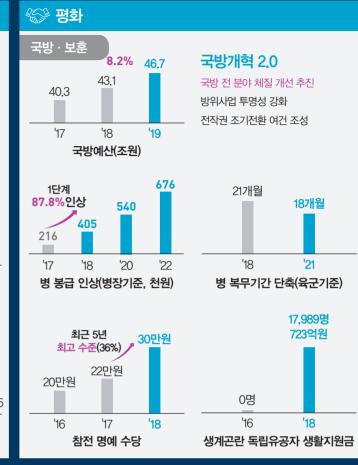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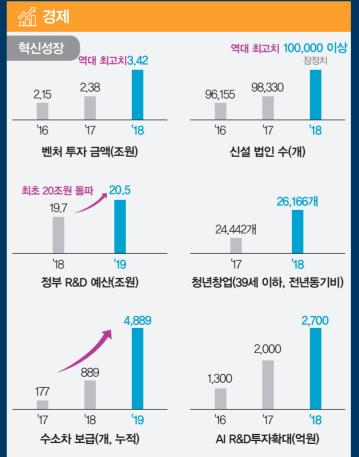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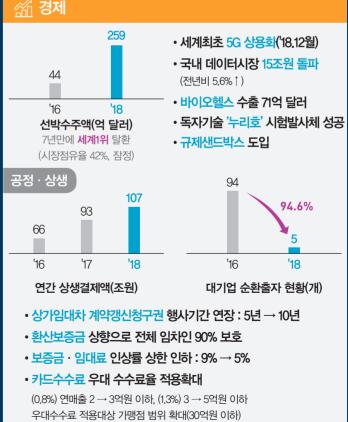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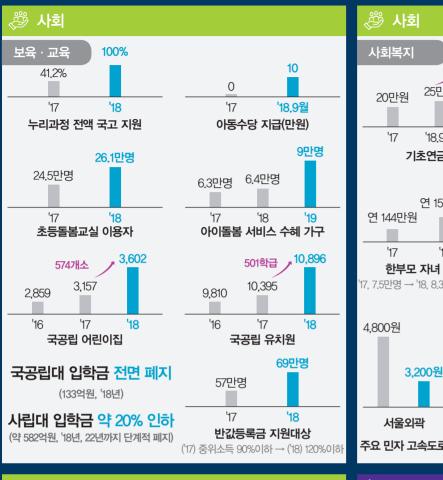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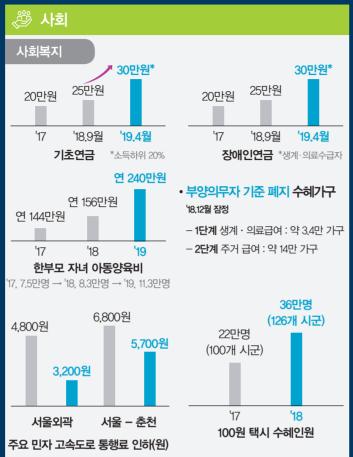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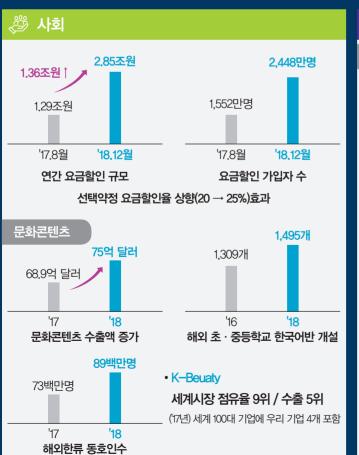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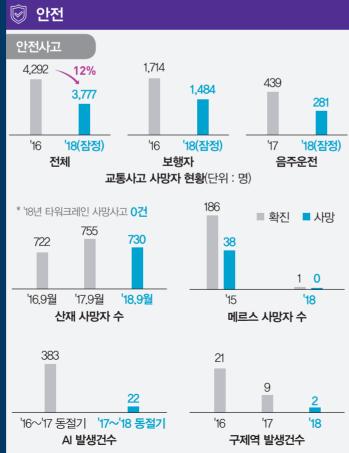
•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(제로페이) 시범 실시 '18.12월

문재인 정부 600일,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









👺 사회

국민건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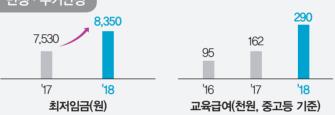
•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

건강보험 적용 (상급종합 기준)	기존	개선
상 복부초음 파('18.4월)	16만원	6만원
뇌 · 뇌혈관 MRI('18,10월)	66만원	18만원
상급종합 · 종합병원 2 · 3인실(¹18,7월)	15만원	8만원

65세이상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50% → 30%



민생 · 주거안정



민생 · 주거안정 14.8만호 12.7만호 98만호 17 18 3-3-2만호 17 18 3-3-2만호 98만호 98.0% 9.13 부동산대책 98.0% 0.026% 0.09% 69.6% 17.1.1일~8.2일 '18.5.4일~12.30일

- 청약가점제 확대. 무주택자 우선추첨 등 청약제도 개편
- 수도권 신규 공급택지 개발 추진 30만호
- 규제개선(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등) 통한 도심내 공급확대 추진
-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 확대

주택시장 매매가격 동향(서울)

爲 지역

3.3조원 확충

(기존)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\rightarrow (확대) 만65세 이상 (기초연금수급자 포함)

서울 일반공급 무주택자 당첨자비율

지방소비세율 인상



생활안전

• 미세먼지 저감조치

- 경유차 배출 저감
- 친환경차 확대
- LNG 등 친환경 발전 가격경쟁력 제고
- 봄철(3~6월)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조정 등
-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(16만실, ∼'19.2월)□세먼지(PM2.5) 농도(전국)

25μg/m³





- 계란 신란일, 생산자고유번호, 사육환경 등 표시 의무화
- 24시간 365일 해외안전지킴센터 운영, 우리국민 보호

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 수

지역경제·지방분권 3.500명 167곳 1.700명 33곳 '17/'18 청년영농 · 영어정착지원금 신설 도시재생 뉴딜 사업대상지 (월 100만원 수준) 193.376원 300곳 128.660원 70곳 '17 '22 '19 쌀 산지가격 회복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• 495개 생활밀착형 SOC 사업 추진 4%P 11% '19년 예산, 8.6조원 • 571개 국가사무 일괄 지방이양 • 추가 조세부담 없이 지방재정

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

3 ±

번째

호 (2018

11년만에 남북정상회담

사상 첫 북미정상회담

北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 NLL 침범 횟수

"지금 한반도는 <mark>세계사적 대전환기를</mark> 맞고 있습니다.

지구상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냉전질서를 해체하고

평화와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" (프랑스 파리 국빈 환영 리셉션, '18.10.16)

한반도 평화를 위한 숨가쁜 여정이 이어졌습니다.

- 베를린 구상('17.7월)과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('17.11월)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에 대한 의지를 천명
- 평창동계올림픽(18.2월)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,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
-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개최.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 합의



하늘 · 땅 · 바다에서 총성이 사라졌습니다.

-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야 합의서('18.9.19.)채택
- 상호 적대행위 중지('18.11.1.)
-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('18.10.27.)
- GP 시범 철수('18.12.12.)



평화가 경제입니다.

-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· 도로 연결 현대화 착공식('18.12월)
- * 대북제재 감안, 단계적 추진
- 양묘장 현대화 및 산림병해충 공동 대응
-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 완료('18.11~12월)
 "DMZ 평화 관광이 활성화 되고, '18년 외국인 직접 투자가 사상최고치(269억 달러)를 기록하는 등 평화의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"



남북화해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

- 3년만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, 170가족, 833명의 이산가족 상봉('18.8월)
- 2018 아시아경기대회, 국제대회(농구·탁구 등) 공동참가
- 예술단 상호 방문공연
-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재개



튼튼한 국방으로 평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

[2018]

국방개혁

87.8%

국방 전 분야 체질개선 추진 ('18년)

병 복무기간 단축 (육군기준)

병 봉급 인상률 ('18년)

정예화 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'국방개혁 2.0'을 마련. 국방 전 분야 체질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.

- 북핵 · WMD 위협 대응 핵심전력 적기 구축. 상비병력 감축 · 병 복무기간 단축. 군 첨단화 등 국방인력 구조개편 추진
- * 병력감축: ('18년 말) 60만명 → ('22년) 50만명 / 병 복무기간 단축(육군기준): ('18년) 21개월 ('21년) 18개월
- 방위사업 투명성 강화
- * 방위사업 중개업 등록대상 확대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시 신고 의무화 등

군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조기전환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.

-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 주둔 및 현재의 연합사와 유사한 체제 지속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'연합방위지침' 및 각종 전략문서에 한미 간 합의 ('18.10.31)
-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, 포괄적 핵 \cdot 미사일 대응능력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 $_{3 ext{\it T}/4}$ ('18.6~10월. 한 · 미 공동점검) 2단계 676,115

장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.

- '18년 병 봉급 87.8% 인상(병장기준 216.000원 → 405.700원)
- 사망 및 공무상 부상 장병에 대한 치료비 등 끝까지 지원
- 개인 휴대폰 사용, 평일 일과 이후 외출 활성화, 외박지역 제한 폐지



병 봉급 인상(병장기준, 원)

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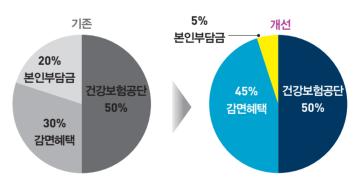
17.989₈ 202₈

최근 5년대비 최고 수준의 참전명예수당 인상('18년)

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처음으로 생활지원금 지급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

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했습니다.

- 생활지원금 생활이 어려워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제도 신설 (18년)
- *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후손 17.989명에게 723억원 지급
- 보상금 최근 5년 대비 최고 수준의 보상금 인상
- * 보훈보상금 : (역대정부 평균 인상률) 3.7% → ('18년 인상률) 5%
- * 참전명예수당: ('16년) 20만원 ('17년) 22만원 ('18년) 30만원(36% 인상)
-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보훈병원.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대폭 확대
- * 1인당 평균 외래진료비 125.290원 기준 본인부담금 25.058원 → 6.264원(75% 감소)



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(18년)

독립정신 계승 및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.

- 독립유공자 발굴 · 포상 확대
- * 여성 독립운동가 202명 발굴. 독립유공자 포상 355명(전년비 86명 증가)
- 3 · 1 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을 통한 독립정신 계승 및 확산 노력
- *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('18.1월) 및 '10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' 확정('18.12월)

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견실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

3 th Each

선 천억 달러

세계 번째

1인당 국민소득 ('18년 기준)

사상최초 수출 (세계 6위)

30-50클럽 (소득 3만 달러, 인구 5천만)

국민소득

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.(18년 31,000달러 상회 추정)

- 세계 7번째로 30-50클럽 가입 (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, 인구 5천만명 이상)
 - * 30-50클럽: 미국, 독일, 영국, 일본, 프랑스, 이태리

경제성장률

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시에도 양호한 성장세입니다.('18년, 2.7%)



수출

역대 최고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.

(18년 6,052억 달러)

- 사상 최초 수출 6천억 달러 돌파(세계 6위)
 - * 역대 수출액(억달러): 1위 6,055(18년) 2위 5,737(17년) 3위 5,727(14년)
- 무역규모 1.1조 달러, 세계 9위('18년, 잠정)
- 신남방 지역 수출 역대 최대 실적 경신(1,159억 달러, 잠정)
- 신북방 지역 수출 4년만에 100억 달러 상회



소득·소비

가계소득이 개선되며 소비도 견조한 흐름을 지속했습니다.

- 임금 상승폭 확대로 근로자 가구 중심으로 가계소득 개선
 - * 가계소득 증감(전년비): ('17,3분기) 2,1% → ('18,3분기) 4,6%
- 견조한 소비흐름 지속
 - *소매판매(%. 전년비): ('17)1.9 →('18.1/4)5.0 →('18.2/4)4.7→('18.3/4)3.8



가계소득 증감(전년비, %)

물가상승률

'18년 물가상승률은 1.5%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.

외환보유액

'18년 외환보유액은 4,037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*'18.12월말 현재

기타 거시지표

국가신용등급(AA) 역대 최고치, 외국인 투자유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

*국가 신용등급(S&P 기준): 중국·일본보다 2등급 높은 수준 * 외국인 투자유치: '18년 269억달러

더 노력하겠습니다!

- 지난 600여 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매진하였습니다.
 그러나, 국민이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는 부족했습니다.
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. 뼈 아픈 부분입니다.
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.
- 다시 뛰겠습니다!
 우리 경제의 거시 경제지표는 양호한 만큼, 국민 · 기업과 힘을 합쳐 정부가 전력투구한다면 반드시고용불안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습니다.
- 올 한 해, 정부는 무엇보다 시장의 근본적인 일자리창출 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. 주력산업 · 신산업 · 서비스산업 영역에서 산업혁신과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 미래 인재양성과 함께, 일자리 어려움이 큰 청년 · 여성 · 어르신 등에 대해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.

고용의 질을 개선하고,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

1.377tg 1.343tg 17.2tg

'18년 상용직 취업자 수

'18 12월 고용보험 가인자 수

공공부문 비정규직 **정규직 전환 결정**('18.12월)

상용직 증가. 고용보험 가입자 수 확대 등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습니다.

-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이상 늘리고.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60%로 상향.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. 예술인 대상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('18.7월).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
- '한국형 실업부조'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('18.8월, 경사노위)





고용의 양적 성장은 다소 둔화 되었습니다.

- 생산가능인구 감소, 온라인화 · 무인화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로 연간 취업자가 9.7만명 증가에 그침
- 다만, 고용률(15~64세)은 66.6%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, 청년 · 여성의 고용률은 지속 상승

청년. 여성. 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.



-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2.8만명의 청년을 정규직 추가 채용
-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 소요기간 단축 및 장기근속 유도
-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





- 여성의 재취업 지원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 강화
- * 새일센터 이용 취업자 : ('17) 17.1만명 → ('18) 17.3만명(추정)



- 주된 일자리 근속기간 증가 지원 강화
- * 주된 일자리 근속기간 : ('16년) 14년 11.1개월 → ('17년) 15년 3.5개월 → ('18년) 15년 4.9개월
-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
- 만 50세 이상을 대상. '상담-훈련-재취업' 패키지형 서비스 제공

농어업부문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있습니다.

- 청년 영농 · 영어 정착지원금(월 최대 100만원)으로 청년 창업 지원 * '18년 1,700명, '19년 3,500명
- 새로운 직업 및 일자리 창출
- 새로운 직업: 동물간호복지사 양곡관리사 등('19년 제도화 → '22년 2 800명)
- **새로운 일자리**: 도시농업 관리업, 생활승마서비스업 등('19년 390명 → '22년 2.200명'
- 공동체기반 일자리: 사회적농업, 지역자원 연계 일자리('19년 1.445명 → '22년 9.900명



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고용창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.

- 공공부문 비정규직 17.2만명 정규직 전환 결정('18.12월)
- 맞춤형 일자리 5.9만개 창출
- 현장민생 및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 일자리 충원
- * 소방 · 경찰 등 현장민생 공무원 3.6만명 충원
- * 간호·간병(0.3만명), 장애인 활동보조(0.6만명) 등 2.1만명 / '19년 9.4만명 추가 충원 예정

우리 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

4+1

1,800 q 건

규제 샌드박스 4법 통과

행정규제기본법 상임위 통과('18)

규제개선 방안 확정

세계에서 포괄범위가 가장 넓고 앞선 '규제 샌드박스' 제도를 마련했습니다.

- 규제 샌드박스 도입
- 규제 신속확인, 실증특례, 임시허가를 통해 신제품 · 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
- 중소기업 규제 차등 적용
- 규제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·소상공인에 대해 규제를 면제·유예하는 제도 도입('18.10)
- 적극행정 지원
- 신산업분야 감사자제, 사전컨설팅 제도, 적극행정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적극행정 지원

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.

- 신산업 · 신기술 분야의 규제체계를 先허용—後규제 방식으로 전면 개편, 신속한 시장출시 허용(103건)
- 신산업 · 신기술의 전개양상을 예측, 자율주행차 분야에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(30건)
- 수소 · 전기차, 드론, 가상현실(VR),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현장애로 171건 해소







가치갈등 · 이해상충으로 해결이 지연된 'Big Issue'를 해결하였습니다.

- **의료기기 규제혁신** 첨단의료기기 조기 시장진입. 체외진단분야 '先진입—後신의료기술평가'
-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 확대(현행 4 → 34%)
- 데이터 규제혁신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. 가명정보 이용범위 확대. 데이터 결합 허용 등
- 입국장 면세점 도입 해외여행 국민불편 해소 및 여행수지 개선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개설('19.5월)

"공유경제 등 Big Issue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"

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에 매진하였습니다.

- 지역발전 ·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신('17,12월) → **47건**
- 경쟁제한 규제혁파('17.12월) → **25건**
- 영업 · 입지 규제정비('18.4월) → 38건
- 창업규제 혁신('18.10월) → 105건(86개 업종)
- 시장진입 · 영업규제 혁신('18.10월) → **40건**

사례 외국인 대상 관광안내업 창업 지원

개인 외국인 관광객 안내시, 단체와 같이 일반여행업 등록 (자본금 최소 1억원)

→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및 요건 완화(2천만원 내외)

*개선방안 연구용역중

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해소하였습니다.

- 행정조사 혁신('17.12월) → 175건
- 온라인 · 전자문서 규제혁신('18.5월) → 113건
- 시험 · 검사기관 운영 개선('18.6월) → 157건
-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→ 367건

사례 진료기록 온라인 발급확대

진료기록 사본 필요시 의료기관 직접 방문

→ 본인 인증 · 확인 후 온라인 사본발급 허용
*의료법 시행규칙('18.9)

규제개혁신문고

국민의 규제애로,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.



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혁신성장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

3.4_{x8} 20.5_{x8}

'18년 12월, 세계최초 상용화

'18년 벤처투자 역대 최고치

'19년 정부 R&D 예산 최초 20조원 돌파

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반(Network-Data-AI)을 구축하였습니다.

- 네트워크 모바일라우터 기반 5G 서비스 상용화('18.12월). '19. 3월 세계최초 5G 스마트폰 서비스 개시
- 데이터 국내 데이터 시장 15조원 돌파(전년대비 5.6%↑). 2023년까지 30조원 규모로 성장 추진
- 인공지능 AI 전문기업수 증가('16년 27개 → '18년 43개). AI 유니콘기업 10개 육성(~23년)

* 미국과의 기술격차: '16년 2.4년 → '18년 1.8년(ICT 기술수준 조사보고서)

미래혁신산업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

- 수소경제 세계적인 수소기술을 활용, 2030년 수소차 · 연료전지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목표
 - *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 성공. 핵심부품 99% 국산화. 수소차 세계시장 점유율 50%
 - * 수소차 보급(대) 177('17) → 889('18) → 4.889('19) / 수소충전소 구축 '18년 14기 → '22년 310기
- 스마트공장 '19년 4천개를 포함해 '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
- '19년 2개 → '22년 10개 조성 • 스마트산단
- · 스마트팜혁신밸리 '19년 2개 → '22년 4개 조성
- 스마트양식클러스터 '22년 2개 조성
- '18년 2.99GW 재생에너지 보급 • 친환경에너지
- 바이오 「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」 본격 추진
 - * 바이오헬스 수출 71억 달러(전년대비 30.9% 1. '18.상)
- 우주 독자기술 '누리호' 시험발사체, 차세대소형위성 1호 등 발사 성공, 우주 주권국으로 한단계 전진



민간이 주도하는 혁신기업 창업 생태계를 조성 하였습니다.

- **혁신창업 생태계 조성** 혁신모험펀드 10조원(~'22년). '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' 구축(65개소).
 - '지역 혁신창업 허브' 등 → '18년 신설법인 수 역대 최고인 10만개 돌파
 - * 신설법인 수 : ('16) 96.155 → ('17) 98.330 → ('18) 100.000 이상(예상치)
- 민간중심 벤처 혁신 벤처확인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전문가로 변경, 진입장벽 완화 등
 - → 벤처투자 역대 최고치(3.4조원), 벤처투자 회수 역대 최고치(2.7조원)
- 연대보증 폐지 업력에 관계없이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('18.4월)
 - *(기존)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('17.8~) → (개선) 업력 관계없이 폐지
- 성장지원펀드 조성(8조원) 중소벤처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

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.

- 반도체 · 디스플레이 적기에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선점을 지원 추월 불가능한 초격차전략 추진
- * 10년간 120조원(민간투자)을 투자. 대 · 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
- * Post-OLED.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선도 기술개발에 2조원 투자
- 자동차 자동차 부품산업 생산성 활력제고 및 미래차 전환 지원
- * 노후차 교체 지원. 친환경차 생산비중 대폭 확대(현 1.5% → '22년 10%)
- 조선 · 해운 친환경 선박시장 창출 지율은항 · 수소선박 개발 등 미래경쟁력 확보
- * '18년 수주량 1.263만CGT로 전년 대비 67% 증가(잠정). '11년 이후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탈환
- *자율운항선박, LNG추진선 개발 및 스마트 K-야드 조성(총 1.5조원)
- * 한국해양진흥공사('18.7) 등을 통해 초대형 컨테이너선(20척) 등 총 57척 발주
- 섬유 · 가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. 전통산업을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
 - *동대문을 중심으로 주문~생산이 24시간내 완결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 구축
- * 중소 · 중견 가전업체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신제품 실증 지원



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.

107_{조원} 7,155_{억원}

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해소 (남8년)

연간 상생결제액(18년). 최초 100조원 돌파

상생협력형 펀드 조성

하도급·가맹·유통·대리점 분야의 甲乙관계 문제를 개선했습니다.

하도급

-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 · 원가정보 요구 금지
- 부당감액, 기술유용에 대한 '원스트라이크 아웃제' 도입 등

-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
- 점주의 영업지역을 본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금지

-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 도입
- 대형쇼핑몰 · 아울렛을 유통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입점업체 보호 강화

대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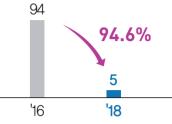
- 반복적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치 상향조정
- 구입강제, 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행위의 구체적 유형 고시

✔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상승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남

- 하도급 공정위 조치에 따라 '18년 2.103억원 하도급 대금 지급
- 영업지역 침해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 감소(27.5% → 15.5.%) • 가맹
- 유통 판매장려금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 증가(74.1% → 80.9%)

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했습니다.

-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를 90% 이상 해소
- *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 : '16년 94개 → '18년 5개
-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엄중 제재
 - * 18년 과징금 401억원 부과, 법인 6개, 개인 12명 고발
- 정보공개, 재계와의 소통 등을 통해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유도
- *롯데. 대림 등 15개 기업집단이 소유 · 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편안 추진
- 주주권행사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'스튜어드십 코드' 도입 선언('18.7월)



대기업 순환출자 현황(개)

대-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

-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유도
 - ①사내벤처 육성 대기업 참여 확산
 - * 12개 대기업 신규도입. '17년 대비 60% 1
 - ② 대기업의 스타트업 육성 확산
 - ③ 상생협력형 펀드 조성 · 운영(7.155억원. '18.12월)
-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
- '18년 연간 상생결제액 최초로 100조원 돌파('18년, 107조원)



부정청탁과 적폐 등 일상 생활속 낡은 관행들이 근절되고 있습니다.

-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, 교육 · 홍보 등 지속 추진
 - ✓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결과('18.9월)
 - ▷ 국민 중 75.3%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
 - ▷ 국민 중 87.5%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
- 국민들에게 상실감 ·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(생활적폐) 해결
- *「생활적폐대책협의회」 중심 △보조금 부정 수급 △사무장병원 △세무조사 등 생활적폐 지속적 발굴·추진

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국가책임을

확대했습니다

501軸 574₁₁

누리과정 국고지원

아동수당 지급

국공립유치원 신설('18년) 국공립어린이집 신설('18년)

유아

누리과정 전액 국가가 지원합니다.

•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

* 어린이집 국고분 : ('17년) 8,600억원(41,2%) → ('18년) 2조 587억원(100%)

가정에서의 양육도 지원합니다.

74만 6천명의 만0~6세 아동(전체 25.7%)에 가정양육수당 지급('18.12월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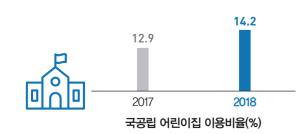
* 만 0세 : 20만원, 만 1세 : 15만원, 만 2~6세 : 10만원

아동수당. 지급대상을 확대했습니다.

- 18년 9월부터 소득 하위 90% 만6세 미만 이동에 월 10만원 지급
- '19년 1월 소득 요건 폐지. '19년 9월 만7세 미만으로 확대

국공립어린이집 · 유치원 확충,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.

- 국공립어린이집 '17년 373개소, '18년 574개소 신설 OECD 국공립 유치원 · 어린이집 취원율(66.9%)
- 국공립유치원 '17년 585학급. '18년 501학급 신설
- 감안, 지속 확충 필요





유아·초등

온종일 돌봄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.

-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돌봄서비스 확대
- *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수 : ('17년) 24.5만명 → ('18년) 26.1만명
- 다함께돌봄센터 확대('19년 150개 → '22년까지 총 1.800개 신설)
-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 및 대상 확대
- * ('18년) 연 600시간(중위소득 120% 이하) ('19년) 연 720시간(150% 이하)
- * 수혜 가구 ('17년) 6.3만 가구 → ('18년) 6.4만 가구 → ('19년) 9만 가구





아이돌봄 서비스 수혜 가구

2018

2019

2017

초·중·고

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.

- 교육급여(부교재비 학용품비) 지원 대폭 인상
- * 초등학생 : ('17년) 41,200원 → ('18년) 116,000원 중 · 고등학생 : ('17년) 95,300원 → ('18년) 162,000원
- '18년 특수교사 1.173명 증원
 - * 특수교사 확보육 : '17년 67 2% →'18년 71 9%

고졸취업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.

- 고졸 재직자가 대학진학시 등록금 전액 지원
 - *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(중소기업 3년 이상 고졸재직자 : 약 9,000명('18년)
-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 초기 자산형성 지원
- * 1인당 장려금 3백만원 : ('18년) 2만4천명 → ('19년) 2만5천 5백명

대한

학생 ·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.

- '18년부터 국 · 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. '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
- 반값등록금 지원대상 확대
 - * 사립대 평균등록금 절반(368만원) 이상 지원 : ('17년) 약 57만명(중위소득 90% 이하) → ('18년) 약 69만명(120% 이하)

|| | | | | |

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, 서민 생계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

20) 25_{만원}

생계·의료급여 **3-4만 가** 2단계 **1**

1.8_{x8}

기초 · 장애인연금 인상 ('18.9월)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수혜가구('18,12월 잠정) **가계통신비 경감** ('18년)

노인 생활안정을 위해 '기초연금'을 인상했습니다.

- 기초연금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('18.9월)
- '19.4월부터 노인 소득하위 20%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

장애인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'장애인연금'을 인상했습니다.

-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 (26만명 혜택, '18.9월)
-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(생계 · 의료. 16만명)의 급여액을 '19.4월부터 30만원으로 조기인상
-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마련
- *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('22년 17천명),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('22년 8개소)

'기초생활보장'을 강화했습니다.

-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기초수급자 증가
 - 1단계('17.11월) :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%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
 - 2단계('18.10월):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 - 3단계('19.1월) :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%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, 생계급여는 소득하위 70% 노인이 포함된 경우도 제외

교통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.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3개 주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
- * 서울외곽(4,800 → 3,200원, 33% ↓), 서울춘천(6,800 → 5,700원, 16% ↓), 수원광명(2,900 → 2,600원, 11% ↓)
-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공사 착수('18,12월), 개통시 수도권 통근시간을 최대 80% 단축
- 전국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공형 택시(100원 택시)를 도입, 주민 이동권 보장
-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('17년 27개 → '18년 36개), 도서민 일일생활권 보장



핵심 생계비 중 하나인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.

-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.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등 연간 약 1.8조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경감
- EBS 교육사이트 무제한 사용서비스 출시, 교육급여 수급 고교생 12만명 우선지원(19년~)

사실은 이렇습니다!

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기초연금 수급이 탈락되나요?

-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하위 70%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제도로서, 소득하위 70%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되고 있습니다.
- 주택 · 토지의 공시가격이 변동하면 선정기준액도 당해년도 노인인구 하위 70%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.
- → 따라서, 공시가격이 변동되어도,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는 노인분이시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계속 포함되게 됩니다.

국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

1.3 _{조원}

15 **8** 만

256 %

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경감

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(2인실) 비용 절감 치매안심센터 설치

건강보험

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였습니다.

- 상복부초음파('18.4월), 뇌 · 뇌혈관 MRI('18.10월) 등 건강보험 적용
- 상급종합병원 · 종합병원 2 · 3인실 건강보험 적용 ('18.7월)
- 선택진료비를 폐지하여 비용부담 해소('18.1월)

대상별 특성에 맞춘 건강보험 혜택을 더욱 확대했습니다.

- 노인: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(50 → 30%)
- 어린이: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(10~20% → 5%)
 18세 이하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(30~60% → 10%)
- 여성 : 난임 치료 시술(인공수정, 체외수정)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혜택 적용

간호간병 통합서비스

환자와 가족의 간병부담을 덜어주는 '간호간병통합서비스'를 확대합니다.

•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담 간호인력이 환자의 회복을 돕는 '간호간병 통합서비스'를 '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

치매국가책임제

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낮추고, 서비스는 확대하겠습니다.

- 중증치매 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(본인부담률 10%로 인하, '17,10월)
- 신경인지검사('17.10월), MRI검사('18.1월) 건강보험 적용
-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, 상담 · 검진 · 1:1 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
-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'인지지원등급' 신설('18.1월)
-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· 요양시설을 5년간('18~'22년) 단계적 확충

재난적 의료비

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,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.

-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%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('18 7월)
- 입원의료비 및 고액 외래의료비(항암 · 희귀난치질환 등)를 소득에 따라 비급여 등 본인부담액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('18.7월)

○ 국민 의료비, 얼마나 줄어드나요?

1. 선택진료비 폐지. 상급병실 급여화

- 만성 신장병, 빈혈,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2세 남아, 신이식술 시행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21일 입원한 경우
- → 당초 본인부담 총 의료비 4,395만원 중 1,243만원 부담 환자, 선택진료 폐지, 상급병실 급여화,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으로 397만원만 부담 (약 68%부담 감소)

2.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

- 폐암진료로 약 3달간 총 3.986만원 본인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66세 환자*의 경우
- * 단. 소득판정 기준(중위소득100%이하) 등 요건 충족 시 지원
- →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통해 1,877만원을 지원받아 약 47%의 의료비 경감

3.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완화 (50→30%)

- 사고 ·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해 치아상실한 65세 어르신이 치과병원에 방문하여 임플란트 1개 시술을 받은 경우
- → 당초 총진료비 약 124만원 중 62만원 부담 환자,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로 37만원 부담 (약 40% 부담 감소)

투기는 차단하고,

실수요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은 강화했습니다

98%

(2018) 14.8 만호

(2017) 12.7

-1.8%

서울 일반공급 무주택 실수요자 당첨자 비율 **공공임대주택공급** (전국, '18년) '18년 전국 전세가격 하락세로 전환

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

투기수요 억제 및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.

- 청약가점제 확대, 무주택자 우선 추첨, 1순위요건 강화 등 실수요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및 관리 강화
-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· 양도세 강화 및 주택구입 대출 규제 강화 등 투기수요 억제
-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(30만호 규모), 도심 내 규제개선(상업지역 ·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)을 통한 도심 내 공급확대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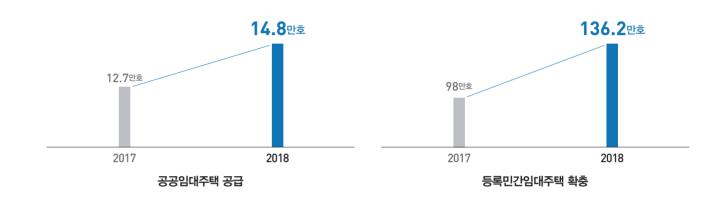




서민 주거 안정

공공임대 공급 확대 및 등록민간임대주택 확충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였습니다.

-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초과 달성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
- 임대료 인상 제한, 의무 임대기간 등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 민간임대주택 35% 증가



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

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
- 청년 ·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, 신혼 특별공급 2배 확대,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
- 어르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,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 등 어르신 주거 지원 강화
- 저소득층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


│|\ 사회

'과로가 있는 삶'을 탈피하고 우리사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

(2016) **2,052**

(2018) 7,530

(2016) 101.5

(2018) 1,978시간

⁽²⁰¹⁹⁾ **8,350**원

(2018.3/4) 105.8

최저임금 인상

인상

노동생산성 지수

(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, '18.10월까지 실적기준 예상치)

연간 노동시간

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있습니다.

- 1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(근로기준법 개정. '18.3월)
- * 300인 이상 사업장('18.7월~), 연장근로를 제한없이 실시할 수 있는 특례업종 축소(26개 → 5개)
-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대해 재정지원 및 생산성 향상 지원(18.5월)
-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노동시간 지속 감소
 - * 임금근로자 연간 노동시간(시간) : ('16년) 2,052 → ('17년) 2,014 → ('18년) 1,978 ('18.10월까지 실적 기준 예상치,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)

출산 · 육아 · 돌봄 지원 확대를 통해 일 · 가정 양립을 확산하고 있습니다.

- 출산휴가 급여 인상
- *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: ('17년) 150 → ('18년) 160 → ('19년) 180만원
-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남성 육아휴직 지원 강화
- * 남성 육아휴직자(명) : ('16년) 7,616 → ('17년) 12,043 → ('18년) 17,662
- 영세 ·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
- * 직장 어린이집 설치 사업장(개) : ('16년) 948 → ('17년) 1,053 → ('18년) 1,111

최저임금 현장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- 최저임금 인상('18년 7.530원 → '19년 8.350원)
- '일자리 안정자금' 신설.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(10인 미만.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 중심)
 - * 지원실적(18년) : 총 66만개 사업장, 264만명의 노동자에 대해 2조 5.136억원 지원
-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사회안전망 확충
-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, 복리후생비를 단계적으로 포함(최저임금법 개정. '18.6월)
- 최저시급 환산시, 주휴수당 및 주휴시간 포함 명확화(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, '18.12월)

'문화가 있는 삶'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- 도서 · 공연비 소득공제
- *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, 도서구입비 · 공연관람비의 30% 공제(추가 100만원 한도)
-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도입
- * '18년 2만명 / 근로자 적립시 기업 · 정부 지원
- 도서관 · 박물관 · 미술관 등 전국 문화기반시설 확대
- 통합문화이용권,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저소득층 문화향유 확대
 - * 통합문화이용권 '17년 152만명→'18년 159만명/ 스포츠강좌 이용권 '17년 40,826명→'18년 43,750명
 - * '16년 2.595개 → '17년 2.657개 → '18년 2.749개

사실은 이렇습니다!

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신설되나요?

-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정(1953년)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수당으로,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.
- 금년 최저임금(시급 8,350원)을 고시(18.8월)할 때에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 1,745,150원을 명시하였습니다.
- → 시행령 개정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이 포함되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.

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<mark>안전사고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</mark>

12%

94%

30 de

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('16년 대비) 조류인플루엔자(AI) 발생건수 감소 30여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, 위험의 외주화 방지

국민생명지키기 3대프로젝트 (교통사고 · 산재 · 자살)

●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폭 감소했습니다.

- 보행자 중심 체계 전환, 음주운전 처벌 · 기준 강화,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등 예방 · 관리 강화
- * 음주운전 처벌('18.12) : 사망사고 발생시, 1년 이상 → 3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 음주운전 기준('19.6) : 면허정지 0.05% → 0.03% 이상 / 면허취소 0.10% → 0.08% 이상



② 산재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

- 30여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
- * 현행 도급인가 대상인 유해 · 위험 작업의 사내도급 원칙적 금지, 원청의 책임 범위를 사업장내 모든 작업으로 확대
- 건설현장 휴일공사 제한, 발주기관 책임강화
 - * 건설현장 사망자 수, 4년 만에 첫 감소 전망 2018년 타워크레인 사고사망자 0명



장 자살 자살자 수 감소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.

- 과학적 분석에 근거, 지역사회와 함께 자살예방 집중 추진
-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(☎ 1393) 개통
-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의 유통 금지.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

메르스(MERS)와 조류인플루엔자(AI)를 철저히 막아내고 있습니다.

- 메르스 환자 1명 유입되었으나 초기 격리 및 긴급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확산없이 종료
- 조류인플루엔자 농가의 조기신고, 선제적 이동중지 명령, 반경 3km 살처분 원칙 적용 등 신속한 초동 조치
- * AI · 구제역 특별방역기간('18.10월~'19.2월) 운영중, '18/19년 동절기 현재까지 AI 미발생



재난관리체계를 내실화 하였습니다.

안전점검 내실화

- 안전점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점검 실명제 및 점검결과 공개 등 국가안전대진단 개선
- •약 600만개 시설물의 안전정보 DB 구축 및 대국민 공개 기반 조성



-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를 읍 · 면 · 동 단위로 확대. 국고 추가지원(160억원)
- 주택 피해자 재난지원금 44% 상향(전파 900 → 1,300만원, 반파 450 → 650만원)

정보전달 체계개선

- 지진 · 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 발송 단계를 축소(기상청 · 행안부 ightarrow 기상청 직접 발송)
- 총 14,365기 전광판을 활용한 민방위 경보 전파체계 마련(18.12.)

국민의 <mark>건강</mark>하고 <mark>안전한 삶을</mark>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

47_{만대}

1.5_{만여}ር

365²
24 AZ

미세먼지 저감위한 친환경차 보급 (18년 누적) **통학버스 안전장치 설치** (*18년 기준) 해외안전지킴센터 운영

전방위적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.

- * '18년 미세먼지(PM2.5) 농도 : 25 → 23µg/m³으로 2µg/m³ 개선(△8.0%)
- 경유차 배출 저감 경유차를 줄이고 배출기준 강화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
 - * 중·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현실화(770 → 3,000만원), '클린디젤' 정책 공식 폐기(저공해 경유차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)
- 친환경차 확대 LPG차, 전기차,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
 - * 친환경차 47만대('18년까지 누적, 전기차 5.7만대, 수소차 889대, 하이브리드차 41만대)
 - → '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. 수소차 6.7만대 보급(수소버스 2.000대 포함))
 - * 충전 인프라 확충(민·관 합동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기 설치, 수소충전소 310개소 구축)
- 친환경선박 확대 LNG추진선 보급. 친환경선박 대체 지원(선박가의 10%지원)
- 발전 LNG등 친환경발전 가격경쟁력 제고 / 봄철(3~6월) 석탄 발전소 상한제약 확대 등
- 국제협력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

사실은 이렇습니다!

에너지전환 때문에 석탄발전이 늘어 미세먼지가 더 많이 발생하나요?

- 에너지전환의 목표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장기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는 대폭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.
- 석탄발전소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노후한 석탄발전소 폐지 및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.
- * 석탄발전소(발전5사)의 초미세먼지 발생량(만톤) : (16년) 3.07 → (17년) 2.67 → (18년, 잠정) 2.19
- 앞으로도 노후 석탄발전소의 봄철 가동중지,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화력발전 제한, 봄철 친환경연료 사용 확대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더욱 줄여나가겠습니다.

여성에 대한 폭력과 사이버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.



- 공공 · 민간 · 교육 · 문화예술 등 분야별 성희롱 · 성폭력 '신고센터' 설치('18.3월)
- 가해자 처벌의 법정형과 징계수위 상향('18.10월)



- 해외 음란물, 성매매 사이트 차단(64,678건, '18년 기준)
- 웹하드상 불법음란물 및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154,215건(18년) 삭제
-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('18.4월), 상담 · 삭제 등 종합 지원



- 가해자 격리를 통한 피해자 안전 및 신변보호 강화
-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,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활성화



-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(가칭)」 제정 추진
- 스토킹 · 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, 일시보호 등 맞춤형 지원

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.

- '27년까지 '무석면학교' 싴혀 추진
- 유·초·특수학교 통학버스 1만 5천여 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



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.

- 국내생산 가공식품 중 약 85%가 HACCP에 따라 안전하게 생산 · 유통
- * HACCP 적용식품 생산율 : ('16) 68.7% → ('17) 83.9% → ('18) 85.2%
-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적극 차단 * ('17) 평균 88일 소요, 75%차단 → ('18) 21일, 84%

「해외안전 지킴센터」, 24시간 365일 재외국민을 지키고 있습니다.

- 가나 해상 피랍 어선 선원 3명 전원 무사 석방('18.4월)
- 일본 홋카이도 지진 발생시 국민 약 6,000명의 신속한 귀국 지원('18.9월)
- 태풍 위투 사이판 강타시 군 수송기 파견, 고립된 국민 799명 괌 이송('18.10월)
- 리비아 피랍 우리 국민의 조속한 무사 석방을 위한 노력 경주





24시간 모니터링 사건사고 초동대응

VI 지역

지역경제,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

167_{*}

8.6_{x8}

14_{nq}

도시재생뉴딜 사업대상지 ('17년 + '18년) **생활 SOC 사업 예산** ('19년 기준)

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('18년)

지역과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.

- 공공투자 프로젝트 '19년 1분기 중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, 패스트트랙(사업 착수비용 지원 등) 통한 조기 사업 착수
-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(8.6조원)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, 국고보조율 상향 등을 통한 조기 추진
- * 공급자 중심(인구수 기반)에서 수요자 중심(접근시간 기반)으로 정비. (예시) 1곳 / 3만원 → 도보 10~15분

지역 제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.

- 국가혁신클러스터 혁신도시, 산단 등 기존 거점 활용, 14개 지정 규제혁신,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
- 지역산업 위기대응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, 조선업황 회복지연 등에 대응하여 지역 지원대책 수립
- 예산지원 자동차, 조선 등 위기지역 지원

* 9,300억원 규모 추경, 1,730억원 규모 목적예비비 편성 · 집행('18년)



국가혁신클러스터

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바꾸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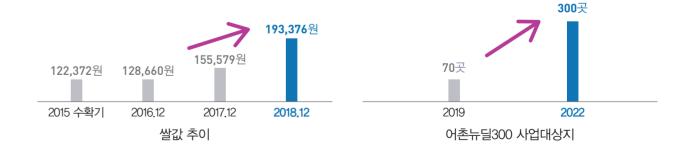
- 지역주도 사업을 통해 구도심을 혁신거점 공간으로 조성, 노후 주거지에는 기초적 생활인프라 확충
- '17년 전 시범사업(68곳) 활성화계획 수립 완료,
 '18년 대상지 대폭 확대
- * 뉴딜 사업대상지: '17년 68곳, '18년 99곳 선정('15/'16년, 33곳)



'18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 지역

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고 있습니다.

- 농촌 역대 최초 햅쌀 가격 형성 전 선제적 시장격리
 - '10년 이후 최대 시장격리 물량(37만톤) 등 총 72만톤 정부매입
 - * 20년전 수준까지 떨어졌던 쌀 산지가격 회복('15년 수확기 122,372, '16년 128.160 → '18년 193.376원)
- 어촌 어촌뉴딜300 해양레저관광 활성화, 정주여건 개선 등 추진
 - '19년 70개소 → '20년 70개소 이상 → '22년까지 300개소
- 항만 상부시설 준공. 규제개선 등 통해 항만지역 민간투자 지속 확대
 - 항만인프라 민간투자 유치: '16년 1.1조원 → '17년 1.3조원 → '18년 1.6조원



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.

* ('16년) 1,087억원 → ('18년) 3,714억원 → ('19년) 약 2조원(계획)

지방분권, 가속화하고 있습니다

3.3_{x8}

571₇₁

30

국세 지방이양

국가사무 지방이양 추진 획기적 지방분권을 위해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추진

자치분권

획기적인 자치분권을 통해 분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.

- 주민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30년만에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추진
- △ '주민주권' 구현: 주민자치의 원리 명시, 정책결정 · 집행과정의 주민참여권 명시 등
- △ **자율성 확대** : 국가-지방 사무배분 기준 마련,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등
- △ **책임성 확보**: 지방의회 의정활동 종합공개, 시·군·구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국가의 시정·이행명령 등
-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추진 (「주민조례발안법」, 「주민투표법」 등 제 · 개정안 마련)
- △ **주민조례발안제 도입**: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출, 청구연령 하향(19 \rightarrow 18세) 등
- △ **주민투표제 · 주민소환제 활성화** : 주민투표 대상 확대,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등
- △ **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**: 주민제안사업 신청 획기적 증가('16년 4.3조원 → '18년 8.5조원)

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중앙정부 기능을 과감히 이양하겠습니다.

- 지역경제 활성화, 주민생활 편의 · 안전 등과 관련된 571개 국가사무 일괄이양
- 「지방이양일괄법」 제정안 국회 제출
- 장기 미이양 사무 신속이양을 위한 66개 법률 일괄개정 추진

재정분권

추가적 조세부담 없이. 지방재정을 3.3조원 확충하였습니다.

- 국세 3.3조원 지방이양 완료('19년, 「지방세법」 및 「부가가치세법」 개정)
-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. 지방소비세율 4%p. 인상(부가가치세액의 11% → 15%)



지역의 자율성 ·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'재정분권'을 추진하겠습니다.

- 1단계 재정분권('19~'20년)
-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(10%p.)으로 8.4조원 이양
- 소방안전교부세율 단계적 인상(25%p.)으로 소방직 국가직화 등을 위한 재원 마련
- 2단계 재정분권('21~'22년)
-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혁신 추진
- 지방세 추가 확충. 중앙정부 기능의 추가 이양 등

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

1.159₉ 3.2_{∞8}

신남방 지역 수출 역대 최대 실적

'19년 ODA 예산규모

기업환경평가 결과 (세계은행) G20 국가 중 1위

주변 4국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.

•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



한미 FTA 개정. 철강관세조치 면제 및 대이란 제재 예외 확보 등 국민경제 밀접 현안을 원만히 해결

• 정상 · 고위급간 소통 통한 양국관계 신뢰 회복



• 경제협의체 재가동, 미세먼지 공동대응 등 국민체감형 실질협력 분야 진전

일본

• 셔틀외교 복원·고위급 소통 활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기반 마련



• 진실과 원칙에 입각한 과거사 대응



• 19년만의 러시아 국빈방문 등을 통해 양국 정상간 우호, 신뢰 강화



정상간 합의에 기반, 한-러 서비스 · 투자 FTA 추진, 남북러 3각협력 한-러 공동연구 개시

외교다변화의 길. 남북으로 지평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.

신북방정책

- 한-러 지방협력포럼 출범(11월, 포항)으로 러 극동과 포괄적 협력의 장 마련
- 중앙아 국가들과 대규모 에너지 · 인프라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추진중
- 2018년 한-러 교역 31%(248.2억 달러), 한-중앙아 교역 49.1%(29.7억 달러)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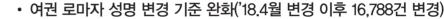
신남방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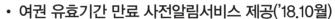
- 3P 분야(사람, 상생번영, 평화)에서 아세안 및 인도 등과의 협력 강화
- 2019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 합의
- 신남방 지역 수출 역대 최대 실적 경신(1,159억 달러)

문화 콘텐츠(한류)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

- 한류문화의 해외진출 확대
- * 문화콘텐츠 수출액: '17년 68.9억달러 → '18년 75억달러 해외 한류 동호인 수: '17년 73백만명 → '18년 89백만명
- * K-Pop: BTS 빌보드 차트 1위(앨범 부문)
- 게임: 배틀그라운드 100개국 1위, 1일 1억명 접속
- 캐릭터 : 핑크퐁. 유튜브 100억뷰
- K-Beauty: 세계시장 점유율 9위 및 수출 5위
 - * ('17년) 세계 100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 4개 포함
- 해외 28개국, 1495개 정규 초 · 중등학교에 한국어반 개설

국민들의 출입국 편의성을 높였습니다.





전국민 출입국자 절반이 자동출입국심사 사용('16년 36% → '18년 50.8%)

상생의 개발협력을 통해 국제협력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.

- '19년 ODA 예산 규모 3.2조원으로 확대('18년 3조482억원, 1.521억원 증가)
- ODA 규모 확대(1.312개 → 1.404개). '개발협력전략회의' 신설 등 통해 체계적 지원
- 해외봉사단 등 청년 해외진출 기회 제공(5.315명) 및 민간 참여 확대(84개 → 111개)

세계가 본 대한민국

- 세계은행(WB) 기업환경평가 결과 190개국 중 5위('18년)
- * G20 국가중 1위, OECD 국가중 3위로 선진국 상위권 수준을 유지
- 세계경제포럼(WEF) 국가경쟁력 순위 140개국 중 '18년 15위 ('17년 17위)
- 언론자유지수: '16년 70위 → '18년 43위(국경없는 기자회)
- OECD 정부 신뢰도(34개국): '17년 32위 → '18년 25위
- 씨름,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('18.11월)



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

대상	분류	지원정책
도 영.유아	육아부담 경감	 아동수당 10만원 지원 확대 ('18,9) 소득하위 90%, 만6세 미만 → ('19.1) 만6세 미만 모든 아이 → (19.9) 만7세 미만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소득무관, 유아교육비 ·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만6세 이하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양육비 지원(74.6만명, '18.12)
	육아지원	 국공립 유치원 · 어린이집 확충 (유치원) 501학급('18) → 1,080학급 신설('19) (어린이집) 574개소('18) → 550개소 신설('19)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-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양육부담 완화 * 지원 시간 : ('17) 연 480시간 → ('18) 연 600시간 → ('19) 연 720시간 대상 확대 : ('18) 중위소득 120% 이하 → ('19) 중위소득 150% 이하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- 아파트, 주민센터 등 활용, 지역중심 돌봄 공동체 활성화 * ('17) 160개소 → ('18) 205개소 → ('19) 276개소 * 이용인원 ('17) 66.5만명 → ('18) 95.1만명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인상 -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번갈아 사용 시, 두 번째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로 지급 * ('18) 상한200만원/월 → ('19) 상한250만원/월 한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확대 ('17) 13세미만, 연 144만원(7.5만명) → ('18) 14세미만, 연 156만원(8.3만명) → ('19) 만 18세 미만, 연 240만원(11.3만명)
아동	학교안전	 통학버스 안전 강화 모든 유·초·특수학교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등 설치(1만5천여대, '18) 승하차 문자전송, 위치알림서비스 ('18, 500대 → '19, 700대) 학교 미세먼지 관리 모든 유치원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(74,860실 추가 설치, '19.2) 미세먼지 '나쁨'이상시, 질병결석 인정('18.4) 학교시설 석면 제거 '27년까지 무석면 학교 추진 ('17.6~'18.2, 전국 1,775교(8.5%) 석면제거) 학교 내진보강 지진위험지역 7년내 보강 완료(연간 1,000억원) 고 외 지역, '25년부터 12년내 내진보강 추진(연간 1,000억원)

대상	분류	지원정책
아동 아동	초등돌봄	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(초등 돌봄교실) 초등 1~2학년 중심 돌봄 확대 * '17년 24.5만명 → '18년 26.1만명 → '19년 28만(예상) (다함께 돌봄센터) 초등 방과후 예체능 등 맞춤형 돌봄 확대 * 현 23개소 → '19년 150개소 신설 → ~'22년 1800개소
청소년	교육지원	 교육급여 지원 대폭 확대 중위소득 50% 이하 초중고 학생 부교재 · 학용품비 지원 (초) ('17) 41,2천원 → ('18) 116천원 → ('19) 203천원, (중고) ('17) 95,3천원 → ('18) 162천원 → ('19) 290천원 고졸취업자 지원 확대 고졸 재직자 대학진학시 등록금 전액 지원('18년, 9천여명)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 자산형성 지원(1인당 3백만원) 특수교사 1,173명 증원 (확보율 '17년 67,2% → '18년 71,9%)
	청소년 안전망 강화	 위기청소년 보호 · 지원 강화(('17) 약 256만건 → ('18) 약 298만건 지원) 청소년 쉼터 ('17) 123개소 → ('18) 130개소 → ('19) 138개소 청소년 동반자 ('17) 1,146명 → ('18) 1,261명 → ('19) 1,316명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('17) 약 1,2만명 → ('18) 약 1,8만명 학습멘토링, 검정고시 등 학업취득 지원센터 확대 * ('17)202개소 → ('18) 206개소 → ('19) 213개소 건강검진 지원 및 지원사항 확대 * 건강검진 ('17) 5,019명 → ('18) 5,134명 * 지원사항 ('17) 건강검진 → ('18) 건강검진, 확진 지원, 출장검진
호 청년	생활안정	 주거안정(2.2만호 → 2.8만호) (주택공급) 만 19~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,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(행복 70%, 매입,전세임대 30~50%) (기숙사) 캠퍼스 내외, 행복(공공・연합)・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, 관계기관 협업 등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 * '17~'18년 추진실적: 29,166명(실입주 14,450명) * 금융・재정 지원 (임차보증금) 만34세・연소득 3.5천만원 이하 中企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('18년 247억원 → '19년 831억원), 한도 확대(3,500만원 → 1억원) (주택청약)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(한도 500만원) (근로장려금) 단독가구 소득 2천만원 미만,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, 연령요건(30세 이상) 폐지('19) (교통비) 산단내 中企 재직 청년 대상, 월 5만원 지원 ('18, 15,4만명)

 \sim 41

대상	분류	지원정책
호 청년	취업지원	 청년추가고용장려금: 중소·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(최대3년) 청년채용 인원: ('16) 13.8만 → ('17) → 15.8만 → ('18) 22.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: 중소·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('17) 4.5만 → ('18) 15.4만명 청년 구직활동지원금: 대학 졸업후 2년내 구직활동 지원(월 50만원, 최대 6개월) 청년희망키움통장 5000명 → 10000명 - 생계수급 저소득층 청년(15~34세,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20%이상)의 자산형성 지원(3년 만기 탈수급시 1,440만원)
	교육비 부담 경감	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(133억원) '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('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% 인하(약 582억 원)) 반값등록금 지원 확대 - 사립평균등록금 절반(368만원) 이상 지원대상 확대 : ('17) 기준 중위소득 90% 이하(57만명) → ('18) 120% 이하(69만명) 다자녀 장학금 확대 ('17) 셋째 이상 자녀(5만명) → ('18)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(17만명)
가족	주거지원	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(3만호 → 4.3만호) (국민임대) 평균소득 70% 이하 (행복주택) 평균소득 100% 이하 (매입,전세임대2) 평균소득 100% 이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신혼부부 자금융자 확대 (4.3만가구 → 8만가구) (구입자금) 혼인기간 5년 이내,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, 대출한도 2.2억원(2자녀 2.4억원) (전세자금) 혼인기간 5년이내,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, 대출한도 수도권 2억원/지방 1.6억원
	출산	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(본인부담 30%, '17.10월) ('18) 중위소득 130%, 최대 4회 → ('19) 중위소득 180%, 최대 10회 시술비 지원 ('18. 47억원 → '19. 184억원 지원) 배우자 출산휴가(유급3일+무급2일 → 유급10일) 배우자가 출산을 한 근로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* 휴가 중 5일분 급여 지원(통상임금 100%, 상한 월200만원)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출산급여 지급(90일간 월 50만원, '19)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,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*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(한도200만원)

대상	분류	지원정책
 중.장년	일자리	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('19) 신규 2,500명 지원 경력 및 전문성 갖춘 만 50세 이상 퇴직자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('18) 2,000명 → ('19) 5,000명 신중년 구직자를 적합직무에 정규직 채용한 중소 · 중견기업 중소기업 월80만원, 중견기업 월40만원
	일과삶균형	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기업 ·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추가 지원 ('18년 2만명 → '19년 8만명) ※ 분담비율 : 근로자 50%(20만원), 기업 25%(10만원), 정부 25%(10만원) 도서 · 공연비 소득공제('18.7~), 박물관 ·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('19.7~)
		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해당 비용에 30% 공제(추가 100만원 한도)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('18)6,642명 → ('19)1만명 만50세이상 퇴직자 중 사회공헌 희망자 참여수당 2천원 / 시간, 실비 8 → 9천원/일 지급
	전직지원	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제공 ('17)23,009명 → ('18.11)28,112명 → ('19)3만명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('18) 300명 → ('19) 500명, 신중년 기초 ICT 직업훈련('18) 1,327명 → ('19) 2,000명
		신중년 폴리텍 캠퍼스 ('18)10개 → ('19)14개
	일자리	• 공익형: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, '19년 7만개 확대(월30시간, 27만원)
		 사회서비스형: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2만개 신설 (월 최대 66시간, 70만원 수준) 시장형: 60세 이상, '19년 1만개 확대(시장형사업단 연 210 → 230만원)
	생계 보장	• 기초연금 인상 ('18.9월) 최대 25만원 → ('19.4월) 소득하위 20%월 최대 30만원
		•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비(월 최대 11,000만원) 감면('18.7월)
rwwi	요양 · 돌봄	• 65세 이상 노인 틀니('17.10월) · 임플란트('18.6월) 본인부담 인하 50% → 30%
어르신		•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('17.9월) 20~60% → ('17.10월) 10%
		•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(18) 166개소 → (19) 254개소
		•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(261개소)
		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(종사자 9600명 → 11800명) - 종사자 ('18) 9,600명 → ('19) 11,800명) - 주2회 전화, 주1회 방문 등 안부확인, 복지서비스 연계
		 노인 장기요양보험 확대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대상 재가 · 시설 급여 및 가족요양비 등 지원 ('18년)67만1000명 → ('19년)77만3000명

소상공인-자영업자 맞춤형 대책

인건비

- ① 월보수 210만원 이하 상용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(일자리안정지금)
- '19년에는 5인미만 사업장 우대 지원(월 15만원. '19년)

사회 보험료

- ① 근로자 1~9인 사업장(두루누리사업): **납부액의 80%~90% 절감**
- 대상확대 : 월보수 ('18) 190만원 → ('19) 210만원 미만
- 지원비율 유지 : ('18) 80~90%(신규가입시) → ('19) 동일비율 적용
- ② **1인 소상공인**(근로자無)
- 고용보험: 보험료 30~50% 지원
- 산재보험: 가입 허용업종 확대(제조업 8개 분야. '18. 1)
- → 음식업 등 서비스업 추가. '19)

카드 수수료

① 우대수수료율 적용확대

- (0.8%) 연매출 2→3억원 이하. (1.3%) 3 → 5억원 이하
- (온라인 판매업자. '19) 3.0% → 1.8~2.3%
- (개인택시 사업자. '19) 1.5% → 1.0%
- (우대수수료 적용대상 가맹점 확대) 5~10억원 1.4%. 10~30억원 1.6%
- ② 소액결제 업종의 수수료 부담 완화('18.7): 연 200~500만원 절감
- ③ 0%대 수수료의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(제로페이) 시범실시('18.12)

세금

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

- *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대상 8/108 → 9/109로 상향
- **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(5%p. '19)
- ② 의료비·교육비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
- ③ 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(500 → 1,000만원,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, '19)
- ④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인상(연매출 2,400 → 3,000만원 미만, '19)
- ⑤ 근로장려금(ETC) 지원요건 완화('19)
- 연령요건 : 30세 이상 → 폐지
- 재산기준 : 1.4억원 미만 → 2.0억원 미만
- 소득요건(만원): (단독)1,300 → 2,000, (홑벌이)2,100 → 3,000, (맞벌이)2,500 → 3,600

임대료

- ① 환산보증금 상향: 전체 임차인의 약 90% 보호
- ② **보증금 · 임대료 인상률 상한** 인하 : **9%** → **5%**
- ③ **계약갱신청구권** 행사기간 연장 : **5년** → **10년**
- ④ **지역상권법 제정 추진**: 건물주·임차인간 상생협약체결 상권을 집중지원
- ⑤ 전통시장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: 대규모 점포 등록 776개 시장

재도전 지원

- ① 사업장 **폐업 · 철거 지원** 강화(18. 최대 100만원 → 19. 200만원)
- ② **전직장려수당** 인상('18, 75만원 → '19, 100만원)
- ③ 구직촉진수당 지급(19): 월 30만원 한도, 3개월간 지급

